

골든타임 지켰지만 본회의 통과 산넘어 산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내년 3월 20일께 자동 상정 의장 결정따라 60일 단축 가능 광주·전남·북 최대 6석 감소 바른미래 의원 8~9명 반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수차례의 고비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22일 합의됐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으로,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배제하고 3월 중순에야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등이 불가피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호남 지역 또 중진 의원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찬성하지만 선거제도 개정에는 반대한다"며 "광주·전남에서 3~4개의 의석이 줄어드는 등 전북까지 포함하면 호남에서 최소 6석 이상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난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 수는 과반을 넘는 177석이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8~9명에 이르고 민주당에서도 선거제 개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다. 최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가 추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갈등을 촉발, 정세 개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별다른 이견이나 갈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할 수 있어 폭발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각 당 내부 추인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부여를 떠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각 당 원내대표들이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추인을 받아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실제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통합정신 훼손 안돼"

이태규 통화내용 공개... "당분간 귀국 않고 공부 계속"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22일 손학규 대표 퇴진론을 포함한 당 내홍 사태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은 "당이 지금은 어렵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려는 소중한 정당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의원 측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전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같은 해 9월 1년 일정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이 의원은 "최근 당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 토요일(20일) 제가 통화했으며, 그때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었다"며 "당분간 국내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더 공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손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당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손 대표뿐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손 대표가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당내 공감대를 만들든지,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전체 당원의 재신임을 묻든지 해서 정도를 걷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민생 패싱 장외투쟁 멈춰라"

한국당에 역공... "저급한 막말 버릇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주말 광화문에서 대(對)민생 투쟁을 벌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멈춰라"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특히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저급한 막말"이라고 집중 공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도를 넘는다. 정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황영표 원내대표도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 전형적인 구대정치, 후진 정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계속 과거로 갈 겁니까. 극우 세력과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까"라고 되물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장외집회를 보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극우 정당으로 가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봤다"며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당의 민생을 보게 됐다"며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 공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 황 대표의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장표 "정부 공간 활짝 열어야"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추경 필요성 강조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치 않으며, 최근 여기저기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 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공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 포인트나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

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 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하려면 더 큰 경제정책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회 쿠데타 ... 총력투쟁 불사"

여야 대치 격화... 민생법안·추경 처리 진통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고 한국당이 초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 대치 정국의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열락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와 함께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홍장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도 더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잠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

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의총을 여는 23일 오전 10시 대척 논의를 위한 '맞붙 의총'을 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합의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5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6 12 point

1 3 0 7 5 8 4 9 2
104 10 point

2 4 6 3 7 1 2 8 0
102 8 point

4 6 2 8 1 0 9 7 3
100 6 point

J2 5 point
J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